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2면	강원도립대 학위수여식	1
에너지경제	온라인	한창수 도의원, 정책연구용역 품질향상 대책 마련	2
뉴스투나잇	온라인	한창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품질 향상 대책...	3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사업 추진"... ..	4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인구소멸 막을 선제적 방안 시급”	5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조례안 심사	5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강특법 '종합계획심의회' 조례 가결	6
THE Lead	온라인	이한영 도의원 “탄광 역사 100년, 폐광지역 주민 위로하는 ...	7
江原日報	21면	[동정]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춘천·...	8
江原日報	16면	양구군의원 의정비 인상	9
江原日報	16면	화천군 의정비 오늘 공청회	9
강원도민일보	15면	양구군의원 의정활동비 '월150만원' 확정	9
강원도민일보	09면	등록차량 15만대 돌파... 주차장 조성 줄민원	10
江原日報	11면	원주 국도 우회도로 단계별 추진	10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시, 산후 조리 지원금 지급 법제화 추진	11
江原日報	15면	'영월형 농촌유학' 5개 학교로 확대	11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 건설업 "1인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 절실"	12
江原日報	13면	고성군, 울산바위 법정탐방로 조성 속도	12
강원도민일보	02면	정부 농지규제 완화 만지작 ... 강특법 퇴색 우려	13
강원도민일보	12면	국내 최대 '삼척 정월대보름제' 23일 개막	14
강원도민일보	14면	오늘 평창 계촌민속5일장 20년 만에 재개장	14
江原日報	02면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5월까지 지정 요청	15
江原日報	07면	원주 늘고 태백 줄고... 도내 취업자 희비교차	15
江原日報	10면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조사 본격 시동	16
江原日報	02면	23일까지 많은 눈... 道 재난대책본부 1단계 가동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수소차 연료 공급망 확대해야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자체 안전 관리 둔감해서야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통전세’ 위험 급증, 피해 없도록 대책 서둘러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어떤 경우라도 응급실·수술실 멈춰서는 안 돼	21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인물 22면



강원도립대 학위수여식 제25회 강원도립대 학위 수여식이 20일 도립대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과 권혁열 도의장, 김광래 도립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02월 20일 (화)

종합

에너지경제**한창수 도의원, 정책연구용역 품질향상 대책 마련**

박에스더 ess003@ekn.kr

**▲한창수 도의원(국민의힘, 횡성)**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 연구·조사를 위해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횡성)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중간점검의 의무화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 미진한 경우 수행자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요구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지체 없는 공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인 적시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반영됐다.

한창수 의원은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평가는 주로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평가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여 정책연구용역 품질을 높여 강원자치도 정책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ss003@ekn.kr

2024년 02월 20일 (화)

뉴스투나잇

강원

한창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품질 향상 대책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태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국민의힘, 횡성)

[뉴스투나잇=김태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국민의힘, 횡성)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연구·조사를 위해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원칙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연구과제의 선정 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중간 점검의 의무화 ▷ 정책연구용역 점검 결과 미진한 경우 수행자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의 요구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지체 없는 공개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인 적시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반영됐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의원은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평가는 주로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평가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여 정책연구용역 품질을 높여 강원자치도 정책형성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누리일보, 명성일보 등 38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0일 (화)

정치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사업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조례 가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25회 임시회 4차 회의가 20일 엄윤순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운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의결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종합계획 심의회 운영',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강원도 조례가 강원도의회에서 가결됐다. 강원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사업으로 고성 통일전망대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0일 제325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도 조례를 가결했다.

종합계획 심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을 비롯해 개발이익 지역 환원,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례는 도의회 추천 4명 이내, 각 분야 전문가, 실국장, 지역개발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2년 이내 임기 위원(23명 이내) 위촉한다고 명시했다.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도에서 직접 부과·징수한 환경 관련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 시설 설치 사업자, 환경 활동 법인·연구기관·비영리 민간단체, 시·군 등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조례는 지정 요건에 사업 부지의 산지 비율이 50% 이상인 지구를 명시했다. 지정 지구의 30% 이내에서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자는 공모나 도지사가 시장·군수 의견을 청취해 지정하나, 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은 농림수산위 조례 심사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잡고 있다"며 "고성 통일전망대 조성 사업을 1호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수산위원회는 영월군 북면 마차리와 거운리 도유림 3만4599㎡에 접산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부결했다. 지역경제 긍정적 기대 부족(윤길로), 자연재해 예방 등 미비(박호균), 주민 의견 수렴 청취(김용복) 등이 지적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종합 03면

도의회 “인구소멸 막을 선제적 방안 시급”

기행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복수주소제·인구정책 등 강조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조

정실 업무보고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25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강원도가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도내에서 강원스테이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지만 더 구체적인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정부로부터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각종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전담부서를 두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강원자치도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수(국민의힘·횡성) 부의장도

“이제는 큰 틀에서 인구정책을 다뤄야 한다”며 “내놓은 사업들이 반짝 효과를 내지 않더라도 미래를 크게 내다본다는 인식에 접근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영미 도 정책기획관은 “도민 200만명을 만들기 위해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또 외국인 비자 특례 등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산업 기반도 갖추고 정주인구도 늘리는 등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종합 03면



자치도의회 조례안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 김용복)는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 4차 회의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은 전찬성(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종합 03면



20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열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서 강정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도의회, 강특법 '종합계획심의회' 조례 가결

산림진흥지구 등 6월 시행 탄력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종합계획 심의회 운영',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강원도조례가 강원도의회에서 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0일 제 325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도조례를 가결했다.

종합계획 심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을 비롯해 개발이익 지역환원,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도에서 직접 부과·징수한 환경관련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환경오염물 질 배출 억제 시설 설치 사업자, 환경 활동 법인·연구기관·비영리 민간단체, 시·군 등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조례는 지정 요건에 사업 부지의 산지비율이 50% 이상인 지구를 명시했다. 지정 지구의 30% 이내에서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자는 공모나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해 지정하나, 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농림수산위원회는 영월군 북면 마차리와 거운리 도유림 3만 4599㎡에 접산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설화

2024년 02월 20일 (화)

THE Leader

자치의정

이한영 도의원 “탄광 역사 100년, 폐광지역 주민 위로하는 기념사업 필요”

이형진 기자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사진= 강원자치도의회 제공). 이형진 기자

(춘천.태백 더리더) “탄광 100년, 의미 있는 클로징 기념 사업 필요”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태백1)이 20일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국과 미래산업국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6월 예정된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언급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한영 의원은 “지역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 이곳 탄광의 역사가 100년에 가까운 만큼 의미 있는 클로징으로 주민을 위로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폐광시 침수 수물 방식의 사후관리라 아니라 광구를 관광자원과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눈앞의 편한 방법이 아닌 지역과 환경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부탁했다.

이어 조기 폐광과 관련해 미래산업국에서 수행 중인 용역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이 의원은 강원도가 정부와 시·군의 중간자로,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자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지역산업의 대안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한영 의원은 산업국의 기업투자유치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지역별로 그 지역 환경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구분되므로 ‘춘천·원주·강릉’과 ‘폐광·접경지역’의 환경을 반영한 차별적 투자유치 전략을 세우고, 산업단지 조성시 분양 완료에 매몰되지 않고 조성 목적에 맞춰 기업이 구성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인물동정 21면



◇박기영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춘천·사진 왼쪽)·양숙희도의원(춘천)은 21일 오전 11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강원여성경영인협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6면
양구군의원 의정비 인상

【양구】양구군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가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양구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갖고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오른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인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연간 4,110만 원을 받게 됐다. 정래석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6면
화천군 의정비 오늘 공청회

【화천】화천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15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활동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재 월 110만원에서 40만원이 인상된 150만원으로 정하는 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확정하면 월정수당 187만9,450원을 합쳐 월 337만9,450원을 받게 된다. 장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5면

양구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군의정비심의위 인상 결정

20년간 동결·물가상승률 고려
주민조사 52.2% ‘적정’ 응답

양구군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올해부터 기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구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철호)는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이같이 책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점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한가인 월 150만원으로의 인상방향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2%가 의정비를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연령대별로는 30대(60.9%)와 40대(56.6%) 등의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해안면(63.6%), 동면(60.0%) 등 순으로 높았다.

이번 의정활동비 결정으로 양구군의원들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연 2310만 원을 포함해 연간 총 4110만 원을 받는다.

한편 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내용을

군의회에 통보하고, 군의회는 3월 중 ‘양구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추경예산을 반영한 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임철호 위원장은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위원 전원 동의로 지급기준 금액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동명 ldm@kado.net

강원도민일보

등록차량 15만대 돌파... 주차장 조성 줄민원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09면

춘천지역 5년새 11.6% 늘어

시청 자전거도로에 32면 신설

별말공원 주차타워 주민 투표

춘천시에 등록된 차량 수가 15만대를 돌파,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역 곳곳에서 주차장 조성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1월 기준 춘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15만 17대로 파악됐다.

2019년 13만 4390대였던 총 등록 차량 규모는 2020년 13만 9153대, 2021년 14만 2993대, 2022년 14만 7904대, 2023년 14만 9835대로 증가했다. 불과 5년만에 1만 5627대

연도별 춘천시 차량 등록 현황
출처/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단위/대

	총 계	승용차
2019년	13만4390	10만8568
2020년	13만9153	11만2984
2021년	14만2993	11만6836
2022년	14만7904	12만938
2023년	14만9835	12만3044
2024년 1월	15만17	12만3190

(11.6%)가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증가는 승용차가 주도하고 있다.

2019년 10만 8568대였던 등록 승용차는 올해 1월 기준 12만 3190대로 5년간 1만 4622대 (13.4%)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주차장 조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시는 시청 앞에 조성된 자전거

전용 차로를 반대 쪽으로 옮기고 해당 자리에 32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도감사 결과와 주민 민원을 모두 수용한 결과다.

2018년 시청 신청사 조성과 함께 들어선 길이 390m의 자전거 전용 차로는 자동차 도로 방향에 따라 일방향으로 통행해야 하지만 현재 양방향으로 돼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도감찰에서 지적을 받은 상태다.

폐지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온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재 자전거 도로를 반대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신설되는 자전거 도로에는 자동차 운행 방향과 마찬가지로 일방향이 된다. 현재 도로 자리에는 주차장이 추

가로 들어선다. 자전거도로 이전과 주차장 신설 등은 이르면 올 상반기 마무리된다.

이밖에도 춘천시는 최근 낙원문화공원 일원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냈고 지난해에는 석사동 별말공원 주차타워 건립을 두고 주민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유홍규 시의원은 "새명동 공영주차장 폐쇄 이후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다"며 "주차장 조성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시청 앞에 들어서는 주차장에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권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1면

원주 국도 우회도로 단계별 추진

미개설 구간 쪼개 흥업~서원주IC 우선 전의 계획
시 계층화분석 평가로 경제성 평가 극복 방침 세워

【원주】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원주시 속원인 국도대체우회도로 미개설 구간 건설사업을 정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포함시키기 위해 단계별 사업 추진에 나서 주목된다.

20일 원주국토청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 외곽을 순환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미개설 구간을 쪼개 흥업에서 서원

주IC 방향의 5.27km 구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총연장 42.0km 구간 중 현재 미개설 구간인 흥업(광터사거리)에서 소초(선녀골삼거리)로 이어지는 총 15.4km 구간을 나눈 것이다.

미개설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또다시 국책 사업 반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에서 내린 판단으로 해석

된다.

일단 기업도시가 안착하면서 인구 4만명에 달하는 지정면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우선 추진한 후 도로 수요 증대에 따른 경제성이 높아지면 나머지 구간을 7차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계층화분석 평가(AHP)를 통해 부족한 경제성 평가(B/C·비용 대비 편익 분석)를 극복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B/C는 통상 1.0 이상이여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AHP는 0.5 이상

이면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하루빨리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정부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이 유리한 상황"이라며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공조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0면

원주시, 산후 조리 지원금 지급 법제화 추진

최대 50만원 산후조리원 등 사용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원주시가 산후 조리 지원금 지급의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원주시 산모의 산후 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산후 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부모와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시는 조례안을 통해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영유아, 태아는 임신 12주 이상 태아, 사산은 출생 때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산후 조리 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를 출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산모로, 출생일 또는 사산일 기준 원주

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신생아를 원주에 출생등록한 산모여야 한다. 타 법령 또는 조례로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산모가 출생 또는 사산한 날부터 1년 이내 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액은 50만원 이내며,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 부담금, 산모 의료비 및 약제비, 요가 및 필라테스, 수영, 헬스장과 같은 운동시설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수렴된 의견, 관계법률 등을 면밀히 검토, 시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태욱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5면

'영월형 농촌유학' 5개 학교로 확대

군·도교육청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123명 유치
초중등 연계모델 구축... 학부모 일자리도 추진

【영월】속보=영월군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본보 2023년 12월 18일 자 15면 보도)를 막기 위해 농촌 유학 대상 학교를 5개 학교로 늘리는 등 농촌 유학 모델 구축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초·중·고교 입학생은 지난해 대비 128명(18%) 줄어드는 등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영월군과 강원자치도 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도시학생의 농촌 유학 프로그램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통해 영월군은 올해 타 지역

학생과 학부모 123명을 영월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에 따라 농촌 유학 학교를 5개 학교로 늘리고 초등에서 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농촌 유학 모델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학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활력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신규 주거 시설을 조성하고 빈집 및 농촌 체험 마을을 새 단장 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활용 체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촌 유학생 학부모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명서 군수는 "정착형 장기 유학으로의 확장 등 교육적 목표와 지역 발전적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 영월형 농촌 유학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석기자 papersuk1@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1면

강릉 건설업 “1인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 절실”

임금·원자재값 상승 반영 필요
17년 전 제도 적용 어려움 호소
시, 여성기업 등 검토 정부 건의

최근 건설업계의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의계약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해 1인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강릉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미콘과 철근 등 건설관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다 임금, 4대 보험 등

이대폭 오른 반면 1인 수의 계약한도는 2000만원이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수의계약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계약법 이후 한차례도 바뀌지 않아 17년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나마 2인 견적(입찰)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지난 2020년 7월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대상 금액을 종합공사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물품·

용역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한도금액을 2배로 확대했다.

문제는 1인 수의계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실제 최근 10년동안 물가상승은 15.8%, 임금인상은 84% 올랐으며 각종 보험료가 인상돼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도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임금이 비교적 싸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하루임금이 17만~20만원 안팎이고, 굴삭기 등 장비대는 유류비 등을 포함 80만~100만원이어서 공사기간이 길거나 작업조건이 까다로

울 경우 손해를 보기가 일쑤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 낙찰률 92% 적용, 장비대, 인건비를 빼면 남는게 없다”며 “작업조건이 어려운 공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한도금액을 높이는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자재가격이 많이 올라 1인 수의계약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의 한도상향도 검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3면

고성군, 울산바위 법정탐방로 조성 속도

미시령계곡~말굽폭포 구간 등 총 4km 개설 계획
신홍사와 탐방로 개설 문제 물꼬... 용역 재착수

【고성】고성을 거쳐 설악산 산행 명소인 울산바위로 진입하는 법정탐방로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고성군이 조성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과 고성군변영회 등에 따르면 울산바위 법정탐방로를 갖춘 인근 속초와 인제, 양양과 달리 고성군은 법정탐방로가 없다.

이에 군은 미시령계곡~말굽

폭포 2.2km 구간과 용소골 갈림길~울산바위 서봉 1.8km 구간 등 총 4km 구간에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공원계획 변경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그간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를 찾아 탐방로 신설을 건의해 왔고, 국립공원공단에

주민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신홍사와의 탐방로 개설 합의 역시 지난해 문화재청의 문화재(신홍사) 관람료 전면 감액 시행 등으로 숨통이 트였다. 군은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결정(변경) 용역 재착수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들도 불법 산행에 따른 불이익,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근거로 법정탐방로 개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정식 군 관광경제국장은 “올 하반기 공원계획 변경 기본 실시계획 및 행정 협의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천열기자 history@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종합 02면

정부 농지규제 완화 만지작...강특별 퇴색 우려

정책 시행 땀 농지특례 효과 감소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절차·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현행 강원특별법의 농지 특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섰으나 정부는 농지 규제 완화 혜택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해당 정책이 현실화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풀어 문화·상업·생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은 1ha 이상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와 관련,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조치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의 실효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행 강원특별

법은 농림식품부 장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도록 규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을 강원도가 검토해 직접 풀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특례는 오는 6월 시행된다.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조치 수준에 따라 해당 강원특별법 특례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이밖에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 완화와 상속세 감면, 자치조직권 확대,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을 추진·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들 모두 강원도가 강원특별법으로 이양받길 원하는 권한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실속을 챙기려면 실효성 있는 특례를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다수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부의 동향을 살피며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2면

국내 최대 '삼척 정월대보름제' 23일 개막

시내·삼척해변 일원 25일까지
성공 기원 조형물 설치 '인기'
야간 기줄다리 등 볼거리 풍성



국내 최대 정월대보름제인 '삼척 정월대보름제'가 23~25일 사흘간 열리는 가운데, 삼척시가 시내와 해변 일원에 다양한 빛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붐업 조성에 나섰다.

삼척시는 올해 정월대보름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시민·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삼척해변에 보름달 모양의 빛 조

형물을 설치했다. 이번 빛 조형물을 보름달을 형상화한 것으로, 밤바다 구경을 나온 관광객들 사이에서 벌써

부터 추억의 사진 찍기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삼척우체국 일원 대학로에서 삼척정월대보름제의 서막을 알리는 달등터널 점등식을 가진데 이어 플래시 몹을 연출하는 등 깜짝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박상수 삼척시장도 20일 삼척 솔비치에서 열린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 영동지역 대표 민속축제이자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삼척 정월대보름제'를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삼척시가 주최하고 삼척정월대보

름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삼척정월대보름제는 '국보 죽서루, 보름달 빛 아래 하나 된 우리'를 주제로, 삼척엑스포 광장과 시내권, 삼척해변 등지에서 개막 및 제례행사를 비롯해 민속놀이 등 9개 분야 50종 개막·축하·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월대보름 당일인 오는 24일 오후 7시 삼척해변 백사장에서 처음으로 옛 전통을 그대로 복원한 야간 횡발 기줄다리가 펼쳐지고, 오후 8시에는 한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가 마련돼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구정민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4면

오늘 평창 계촌민속5일장 20년 만에 재개장

노래자랑 등 개막 이벤트 풍성
상인 15팀 먹거리·잡화 등 판매
고랭지 농특산물 활용 특화 목표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계촌민속5일장이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21일 20여년 만에 재개장한다.

계촌민속5일장은 지난 1990년대까지 성황을 이뤘으나 이후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쇠퇴하며 2000년대 들어 자연 폐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옛 향수를 되살리기 위해 면면영화와 이장협의회, 체육회 등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계촌민속5일장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21일 20여년 만에 재개장한다. 계촌민속5일장 장터거리.

사회단체와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계촌민속5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 5일장 살리기에 나서 21일 개장식을 갖고 5일장을 운영한다.

계촌민속5일장은 평창농협 계촌

지점에서 계촌초교 앞까지 140여m 구간을 차없는 거리 장터로 조성해 매 1일과 6일 5일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21일 개장일에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계수나무양상불의 색소폰 연주와 주민 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 등 개막이벤트를 마련, 계촌5일장 활성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계촌민속5일장 추진위원회는 5일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민속장 참가상인 15팀을 확보, 다양한 먹거리와 잡화, 지역 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고랭지인 지역 특성을 살려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여름과 가을철에는 지역 특산물 장터로 특화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결속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수막 게첨과 우편물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민속5일장 재개장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부활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주국창 계촌민속5일장 추진위원장은 "지역 상경기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민속5일장을 재개장하기로 했다"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계촌클래식축제와 연계하고 고랭지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시장으로 발전시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종합 02면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5월까지 지정 요청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완전 폐광을 앞둔 태백·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다음달 중 정부에 공식 요청(본보 2023년 12월27일자 1면 보도)한다.

도는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 직전인 5월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완료한 후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 전에 수조원대 정부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도청에서 김진태 지사 주재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계획을 의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민정협의회 의결 후에는 3월 중 고용노동부에 태백·삼척 고용위

도 27일 노사민정협 개최 3월 중 고용노동부에 공식 신청 수조원대 지원 가능... 추후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도 추진

기지역 지정을 공식 신청한다. 태백시와 삼척시는 이미 지난달 태백고용노동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억여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올 5월까지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완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이뤄

지면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위기 대응 지역은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 대규모 SOC 등 지역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조원대의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 2018년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 지역에 지정된 목포·영암·해남은 4년간 2조5,889억원, 조선소 가동 중단, GM 폐쇄 등의 위기를 겪은 군

산은 1조 4,399억원이 투입됐다. 올 6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면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시의 피해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고용위기 지정을 위해서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야 해 일정이 빠듯하지만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 절차도 남아있어 정부가 5~6월께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등에 폐광지역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경제 07면

원주 늘고 태백 줄고... 도내 취업자 희비교차

통계청 2023년 지역별 고용지표

7개 시 지역 고용률 1.8%p 상승

원주 7,300명 늘어 최다 증가세

태백 시 지역 유일 500명 감소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난해 하반기 고용상황이 춘천과 원주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부와 산간지역은 오히려 악화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이 시기 도내

7개 시 지역 고용률은 61.7%로 2022년 하반기(59.9%)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부 및 산간지역의 고용 악화가 눈에 띈다. 이 기간 원주 취업자는 7,300명 늘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춘천이 7,100명, 강릉 2,400명, 동해 2,000명, 속초 1,200명 등 순으로 늘었다. 반면 태백은 도내 시 지역 중 유일하게 5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태백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이 400명 줄면서 낙폭을 키웠다. 광·제조업 취업자 또한 100명

감소했다. 이는 계속되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인원 감축에다 대체산업 부재에 따른 구직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등으로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태백지역 고용률은 2023년 하반기 64.5%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군단위 지역 고용률은 70.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올랐지만, 이 역시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영월은 광·제조업에서 100명 증가세를 보였지만, 농림어업과 건설업, 전기·운수·통신·

금융업에서 각각 200명씩 줄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74.1%)을 기록한 화천 또한 농림어업, 광·제조업 등에서 감소세를 보여 600명 줄었다. 이 밖에도 철원(-500명), 양구(-200명) 등에서도 농림어업 위주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했는지와 30~40대가 많은지가 고용률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군 지역은 고령자가 많은지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영농활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고령인들이 많은 지역 위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규호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지역 10면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조사 본격 시동

【홍천】홍천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용문~홍천 노선의 예타 조사를 위탁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홍천군 등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기 양평군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KDI 현장조사 사업 설명·지자체 의견 청취
군 균형발전·정책성 강조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KDI는 현장조사에 이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 및 지자체 의견을 듣게 된다.

지역에서는 KDI가 진행 중인 용문~홍천 노선의 예타 조사 결과가 국토부의 사전타당

성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역·청원역과 홍천군 양덕원역·홍천역까지 연장 32.7km를 개설하는 데 8,400억여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기 양평군과 경기도가 정부의 기존 노선계획에 용문산역과 단월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개 역을 신설하면 전체 길이는 6km, 예산은 1,000억원 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은 용문~홍천 철도의 정책성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 발

전전략 제시 및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경제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예타 조사 운용 지침 개정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의 평가도 크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종합 02면

23일까지 많은 눈... 道 재난대책본부 1단계 가동

23일까지 나흘간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도는 제설장비 603대, 제설인력 2,462명을 전진 배치하고,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군에 지시했다. 또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량·터널 진출입부 등 결빙 취약구간 점검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빙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김진태 지사는 “가용 가능한 제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사설/칼럼 19면

수소차 연료 공급망 확대해야

-안정적 충전 위해 수급 방식 다각화 필요

지난해 수소차 연료 부족으로 충전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곳곳에 충전소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시선을 끄습니다. 운전자들은 충전소가 확충되면, 연료 공급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확충은 자동차 소유주의 편의뿐 아니라, 수소차 생산 등 미래에너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전소와 더불어 연료 공급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춘천과 원주, 태백 등 강원도내 3곳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 충전소 기반 확대를 위해 국비 25억원, 시비 29억 8400여만원 등 총 54억 8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춘천시 삼천동에 충전소 건립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총 72억원의 예산을 편성, 소초면 장양리에 승용차와 버스 모두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도 지난해 12월부터 3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사업을 확정 짓고 오는 4~5월쯤 부지 선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전소 설치에 연료 수급에 애로를 겪었던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탄소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소차 구입 시자

동차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공용주차장과 통행료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정책을 믿고 수소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와 지자체는 춘천과 원주, 태백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료 수급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물류업체 한곳만을 지정해 공동구매해 수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동구매는 구매와 관리에 부담이 큰 수소 튜브 트레이일러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어 선택한 방식이지만,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해선 루트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 공급처를 늘리기 위해선 강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의 공동구매 정책이 행·재정적인 편의를 고려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활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입니다. 또한 도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일상생활과 연계된 수소 정책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1일 (수)

사설/칼럼 19면

지자체 안전 관리 둔감해서야

-강원 안전지수 낙제점 수두룩, 중대시민재해 발생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의 안전 지수가 하위권이라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는데 얼마전 발표된 2023년도 수치에서 강원 지자체는 낙제항목이 수두룩해 안전 정책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일상과 밀접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자체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안전지수를 매기는 6개 항목에서 4,5등급과 같은 하위분야가 전혀 없는 전국 30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도내 지자체는 단 1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강원 지자체의 안전 역량이 이렇게 미흡해서 신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올 1월 1일 평창군 용평면에 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거리에 있던 주민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도중 1명이 잇그제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주민도 매우 위독해 지자체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놓고 사법기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때여서 강원 지자체 전반적인 안전역량을 문제 삼게 됩니다.

안전문제는 현대 생활에 있어서 긴

밀한 영역입니다. 강원은 자연이 좋아 살고 싶은 도시에 들곤 하지만, 실제 거주지로 선호하지 않는 원인에 바로 이런 지자체의 생활환경에 대한 낮은 개선 의지가 영향을 줍니다. 누구나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감한 안전 문제에 소홀하면 지역 내부에서도 자부심을 갖기 힘들고 더구나 외부로부터 거주지로 선택받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1등급을 기록한 여러 시도의 정책 사례를 집중 탐구해 적용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화재분야에서 2022년도 최하위에서 2023년도 최상위 1등급이 됐는데, 그만큼 이유가 있었습니 다. 전기위험이 있는 전통시장 점포 1080호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교체 등을 통해 전기로 인한 화재 사망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전시는 자살분야 지수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됐는데 우선 전담 공무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주민 건강행동 실천율을 기존 40%에서 53%로 끌어올렸습니다. 곧 지자체에서 안전문제에 정책 의지를 갖고 전담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투입해 개선한 만큼 주민들이 더 안전했음을 시사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사설/칼럼 19면

‘강통전세’ 위험 급증, 피해 없도록 대책 서둘러야

도내에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속칭 ‘강통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강통전세는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 이 같은 문제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도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올 1월 도내 아파트 거래 중 전세가율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경우가 53%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41%, 4분기 44%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국 평균 25.4%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세가율 상승을 감안하면 강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다. 고금리 여파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면서 가뜩이나 힘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욱이 80%대의 높은 전세가율이 지속될 때 성행했던 ‘갭투자’ 물량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를 끼고 적은 비용으로 집을 여러 채 샀던 갭투자 물량이 전세가 하락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은행 대출도 막히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높게 받았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된 탓이다.

세입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 담보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 불안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강통전세가 확산될 경우 결국 무주택 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사회문제로 번지게 된다.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일반 서민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강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 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피해 구제가 미진하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들도 전세계약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통전세나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과장이 예고되는 사안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란이 일어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처분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 강통전세 위험 노출 가구에 대한 철저한 진단은 물론 세입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21일 (수)

사설/칼럼 19면

어떤 경우라도 응급실·수술실 멈춰서는 안 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5개 대학병원의 주요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전공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병원마다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라도 수술실과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외래 진료는 물론이고 말기 암 환자마저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자들이 불모로 잡혀 불법적인 집단행동의 수단

으로 동원된 셈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단체행동의 파괴력이 여느 집단과는 다르다. 의사들은 지금 같은 의료 현실에

서 국민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사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심각한 중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은 지방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난처한 상황이다. 의사가 없어 응급실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병원이 도처에 널려 있다. 지방 의료원들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서울에는 문을 닫는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병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대학병원들조차 마취과 의사가 모자라 수술을 제때 못 하고 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숨을 거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의 근본 원인도

의사 부족에서 비롯됐다. 이번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크게 적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8명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해 11월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년 동안 1년에 1,000명은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한 발씩 양보, 대승적 차원에서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자원의

도내 5개 대학병원 전공의 무더기 사직서

증원 반대 의사들 집단행동, 국민 건강권 위협

정부·의료계 한 발씩 양보 절충점 찾아야

효율적 배분을 위한 치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필수·지방의료 붕괴 문제가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비대면 진료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비대면 진료가 병원 운영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들의 반대로 제한적인 시범 사업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열악한 의료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진정성 있게 의료계에 전달하고 의대 증원을 이뤄 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